

종합·해설

MB 국책사업 뒤짚고 폐기하고…

지역 갈등만 키운다

과학벨트·LH 이전 등 균형발전 보다 정략적 대응

민주 손학규 대표 “국민 신뢰 잃고 국론 분열 조장”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이 내건 대표 공약을 뒤집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데 객관성·타당성을 결여하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각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들을 약속한 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복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정치적인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막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책사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 과정에서의 부정성을 상실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보다는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로 막대한 행정력과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7년 8월 공약으로 내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은 백지화됐다. 부산(가덕도)·지자체(경남)

원안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후 돌변했다. 충청 출신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기용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충청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 등

내부 저항에 직면하면서 이 수정안은 결국 부결돼 1년 넘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이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로 막대한 행정력과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최종입지가 충청권인 대전 대덕구로 결정되면서 수개월간 과학벨트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광주 등이 원천무효이며 반발하는 등 ‘공약 뒤집기’로 인한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국가와 국가 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나아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정

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략적인 노립수에 들리리를 서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호남 양보론’을 내세우며 광주시의 과학벨트 유치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려왔다며 ‘들리리’ 주장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시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영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시의 과학벨트 유치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오히려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쉬운도 나타내고 있다.

과학벨트 일부를 대구·경북에 유치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에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넘어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마저 무시하고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에 나선 결과, 5개의 연구단을 배정받는데 그친 것은 사실상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은 결과’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학벨트 유치 초기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립수에 대한 우려를 광주시에 전했었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국책사업을 유

는 등 종력전을 전개했다.

특히, 광주시는 최종 심사를 앞두고

10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30쪽짜리 정성평가 책자를 만들어 전달하며 마지막 헌법의 불씨를 살려갔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와 과학벨트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광주시의 유치 전략이 가장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가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호남권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광주시 서율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팀을 이뤄 첨보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치며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광주시 직원들은 지난 15일 새벽 4시부터 인천공항에 대기하며 한·미 과학장관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을 이 장관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장관 자택 팀과 교과부가 위치한 세종로 팀으로 나눠 공항을 나서는 이 장관의 이동 경로를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의원은 자택으로 들어서는 이 장관을 불잡고 과학벨트의 공정한 심사를 호소했으며 이에 이 장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켰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강계우 부

시장은 이주호 장관의 뒤를 쫓다가

리에 쥐어 넣으려고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민주당 미묘한 신경전

당- “당론 무시 MB정부 노립수에 들리리”

시- “유치 도움주기보다 고춧가루 뿐였다”

정부가 16일 국제과학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대전 대덕구에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광주시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과학벨트 입지의 대전 대덕 확정과 관련, ‘국론분열, 국가리더십 실종, 삼류 장관 평정, 조삼모사 국정 운영’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노립수에 당한 것 아니냐는 아

래야 한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략적인 노립수에 들리리를 서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호남 양보론’을 내세우며 광주시의 과학벨트 유치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려왔다며 ‘들리리’ 주장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시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김영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주시의 과학벨트 유치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며 오히려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학벨트 유치 초기 단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립수에 대한 우려를 광주시에 전했었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국책사업을 유

는 등 종력전을 전개했다.

특히, 광주시는 최종 심사를 앞두고

10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30쪽짜리 정성평가 책자를 만들어 전달하며 마지막 헌법의 불씨를 살려갔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와 과학벨트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광주시의 유치 전략이 가장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가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호남권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광주시 서율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팀을 이뤄 첨보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치며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광주시 직원들은 지난 15일 새벽 4시부터 인천공항에 대기하며 한·미 과학장관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을 이 장관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장관 자택 팀과 교과부가 위치한 세종로 팀으로 나눠 공항을 나서는 이 장관의 이동 경로를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의원은 자택으로 들어서는 이 장관을 불잡고 과학벨트의 공정한 심사를 호소했으며 이에 이 장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켰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강계우 부

시장은 이주호 장관의 뒤를 쫓다가

리에 쥐어 넣으려고 한 것으로 알

려졌다.

광주시 ‘본원유치 설득’ 첨보전 눈물 겨웠다

광주시가 과학벨트 본원 유치를 위해 눈물에 끊어진 호소와 첨보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과학벨트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평가위원을 무려 3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만나 광주시의 과학

벨트 본원 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과학벨트 평가 위원들이 거주하는 대전, 안양, 서울 등 충청과 수도권 일원을 하루 동안에 둘러 광주시의 정성평가 자료를 직접 전해주고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강계우 부시장과 장인균 정무특보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과부, 국회는 물론 서울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 과학벨트의 호남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브리핑하

는 등 종력전을 전개했다.

특히, 광주시는 최종 심사를 앞두고

10대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30쪽짜리 정성평가 책자를 만들어 전달하며 마지막 헌법의 불씨를 살려갔다.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와 과학벨트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는 광주시의 유치 전략이 가장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가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호남권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광주시 서율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팀을 이뤄 첨보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치며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광주시 직원들은 지난

국내에 들어오니 골치만 아프다

국내에 들어오니 골치만 아프다

- 김종우

짓자고...
들끓고...
와서래?

???

MB심판 LH
과학벨트 신공항
배수 망덕

국내에 들어오니 골치만 아프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정심사 촉구 단식투쟁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과학벨트 대전 선정 무효”

정부가 16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대전 대덕구로 결정하자 광주시의회 의원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입지선정 무효화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돌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MB정부 주요 대선 공략·국책사업 갈등 사례

사업	경과	결과
세종시 원안 유지	정부서 시장수정안(행정부처 이전 대신 교육 수정안 국회 부결, 일간 추진 과학중심 경제도시 조성) 추진, 충청권 강력 반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항 입지놓고 부산과 대구·경북, 과학 경쟁 백지화 지역반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에서 충천권 입지 삭제 전국 지역체 후보지 신청 및 과열경쟁	심사 공정성 논란 속 대전 대덕 입지 선정
LH본사 이전	토지공사는 전주, 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 기로했으나 이를 공기업이 통합되면서 일괄 호남 출대한 속 전북 강력 반발 이전 부지 물색	

면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에 기초한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정권은 국책사업 약속을 뒤집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과

한 약속을 무겁게 알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길 요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밝혔으며,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

박 정권은 국책사업 약속을 뒤집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과

한 약속을 무겁게 알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길 요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정권은 국책사업 약속을 뒤집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과

한 약속을 무겁게 알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길 요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정권은 국책사업 약속을 뒤집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과

한 약속을 무겁게 알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길 요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